

## 교회법전 제6권의 개정에 따른 교회 형법의 변화 연구\*

김의태

수원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

### 서론

#### 1.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 1.1. 「83년 법전」 제6권의 개정 배경

##### 1.2. 개정의 필요성

#### 2. 「83년 법전」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변경사항들

##### 2.1. 제기된 질문과 개정의 기준

##### 2.2. 정의 회복을 위한 변화들

##### 2.3. 명확성을 위한 변화들

#### 3. 기타 변경사항

##### 3.1. 처벌과 기타 추가 사항

##### 3.2. 재정적 차원의 범죄

##### 3.3. 시효에 관한 규범

### 결론

\* 이 글은 2022학년도 수원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 서론

2000년대 들어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의 미성년자 성추행 추문과 바티칸 은행의 부패와 비리로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가톨릭교회는 오랜 기간 만연되어 온 가톨릭계의 공공연한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종교적 권위와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재임 당시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역교회 주교들이 형벌 제도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교회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랑과 형벌 사이의 벌어진 인식의 간격으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이 발생하였다는 점,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아닌 단순한 권고와 설득만으로 범죄의 결과인 피해와 추문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가톨릭교회는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교황 프란치스코는 2021년 5월 23일 교황령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Pascite Gregem Dei)를 공포하며 교회법전 제6권인 교회 형벌을 개정한다. 이는 전 세계 교회의 사목적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자의 사랑 실천과 형벌 적용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악을 피하고 인간의 나약함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 형벌이 좀 더 신속하고 명확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형벌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즉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피해자를 위한 정의 회복, 거부할 수 없는 범죄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교정, 추문에 대한 보상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규범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 없었고, 개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겪게 될 법률적이며 사회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형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형벌에 있어 국가법과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들까지도 살펴볼 것이다.

## 1.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sup>1)</sup>

### 1.1. 「83년 법전」 제6권의 개정 배경

교황령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Pascite Gregem Dei)」<sup>2)</sup>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교회법전 제6권의 개정은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에 제출된 주교들의 반복되는 요청과 시목 전선에서 교회 형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시작된 작업이다.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83년 법전」에 실린 형벌 규범들을 재검토하도록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에 명하였고, 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와 주교회의들의 참여로 200개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수천 개의 개별 의견이 연구되었다. 이후 60개 이상의 특별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동력으로 인해 평의회는 교회법전 제6권 개정의 적절성을 논하게 되었고, 특별히 현 사목적 요구에 더 효과적이고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2009년 9월에 열린 교황청 본회의에서 형벌을 보다 적용 가능케 하는 연구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개설하는 안건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략 10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같은 해에 법전 일부를 수정하는 초안과 동시에 비전문가들에게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편람(vademecum)을 출판하자고 제안한다. 2010년 10월에 새로운 제6권의 첫 번째 초안이 준비되었으며 국무성 장관에게 통보한 후 개정작업을 계속하도록 승인받았다.

이때 대략 3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그들의 논의 끝에 첫 계획안 「textus emendatus schematis recognitionis Libri VI(2011)」이 완성되었는데, 여러 차례 그룹 회의(12차례)를 통해 2011년 교회법전 제6권 초안<sup>3)</sup>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무성 장관의 동의로 2012년 2월 말까지 다양한 논의를 요청하며 폭넓은 협의를 거치게 되었다.<sup>4)</sup>

1) D.G. Astigueta, “Una prima lettura del Nuovo Libro VI del Codice come strumento della carità pastorale”, *Periodica* 110(2021), 352-358.

2) Francesco, Costituzione Apostolica “Pascite gregem Dei”, 23 maggio 2021, *Communicationes*, 53(2021), 9-12(이하 「PGD」로 표기한다. 그리고 개정된 조항을 인용할 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202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번역문을 활용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3) Pontificio Consiglio per i Testi Legislativi, “Schema Recognitionis Libri Vi Codicis Iuris Canonici”, *Communicationes*, 43(2011) 317-320.

4) 모든 주교회의, 모든 교회법 학부 및 기타 교회법 연구 상위 기관, 로마 교황청 부서들, 봉헌 생활회 최고장상회의, 평의회 구성원과 자문위원, 기타 교회법학자들까지 그들의 의견이 수용되었다. 이 다양한 협의는 긍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교회 내 형법의 가치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요국을 포함해 50개 이상의 주교회의의 응답이 있었다. 자문해준 평의회와 기관 그리고 전

이후 2012년 10월에는 33차례의 임시 그룹 회의를 걸쳐 개정작업이 좀 더 일관되고 체계화되었다.<sup>5)</sup>

2018년 6월, 신임 평의회장의 교황알현 이후 개정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19년 3월 초, 몇 차례 연구 회의를 거친 후 몇 가지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고, 2019년 5월, 네 차례의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검토한 안건도 추가하였다. 또한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Norme sui delicta graviora)」<sup>6)</sup>과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sup>7)</sup>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평의회는 최종문서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새로운 계획안인 「Novissimus textus Schematis(2019)」를 완성하였다. 이는 2020년 2월 교황청 본회의의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몇 가지 변경사항과 함께 승인되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20년 2월 21일 교황청 본회의가 끝난 후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알현에서 형법 개혁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따라서 2021년 5월 23일 교황령 「PGD」에 따라 새로운 제6권이 공포되어 2021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내며 현재 「83년 법전」의 해당 조항들은 폐지되었다.

## 1.2. 개정의 필요성

교황 베네딕토 16세 재임 당시 각국에서는 여러 성 추문 사건이 폭로되었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역교회 주교들이 형벌 제도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교회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었다. 그리고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지직한 사랑과 자비에 반하는 형벌 제도라는 그릇된 인식<sup>8)</sup>, 교회법평의회가 지적

---

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 5) 수정된 새로운 내용은 더 광범위한 연구 기관에 제출되었으며, 특히 로마 교황청 대학교의 모든 교회법학과와 형법 분야의 전문 교수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제6권의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수용되었고 첫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었다.
- 6) 요한바오로 2세, 신앙고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을 발표하는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43(2011), 85-102(이하 「성사의 성성 보호」로 표기한다.);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Normae de delictis Congregationi pro Doctrina Fidei reservatis seu Normae de delictis contra fidem necnon de gravioribus delictis”, 21 maggio 2010, *Acta Apostolicae Sedis*, 102(2010), 419-434(이하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으로 표기한다.)
- 7) 프란치스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60(2019), 56-69(이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로 표기).
- 8) 발터 카스퍼(Walter Kasper), 『자비(Barmherzigkeit)』, 최용호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5), 314-324.

한 50년 이상 지속된 반법률주의적 경향<sup>9)</sup>이 정의와 사랑 사이에 적대 관계를 조장하였다는 것이다. 교회법이 긴 시간 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추구한 교회 쇄신과 사목의 개방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다.<sup>10)</sup>

성적 학대에 대한 슬픈 현실만큼이나 처참한 폭로가 급증하면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게 요구되었다.<sup>11)</sup> 교황청은 1990년대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직면하였고 2001년 4월 30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자의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를 공포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범죄를 중대 범죄 목록에 포함시켰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신앙고리성에 유보하였다.<sup>12)</sup> 2010년 5월 21일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에서도 미성년자와의 성범죄에 대한 규범은 더 강화되었다.<sup>13)</sup> 이러한 교황청의 움직임은 권위의 남용과 독단을 피하고, 약하고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였고, 나아가 형벌 조치가 하느님 백성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 필요하며 그 조치가 영혼 구원과 사목적 사랑을 위한 요구 조건임을 교회는 재차 인식하게 된다.<sup>14)</sup>

교황 프란치스코 역시 미성년자와의 범죄와 추문 그리고 무책임한 교회 지도자들의 관성 때문에 큰 시련을 맞이하였고, 2019년 5월 7일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를 공포하며 신자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을 촉구하였다.<sup>15)</sup> 마침내 교황은 2021년 교황령 「PGD」을 공포하며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 호소하였고 지역교회 주교와 수도회 장상에게 주어진 처벌 권한을

9) Pontificio Consiglio per i Testi Legislativi, “Schema Recognitionis Libri Vi Codicis Iuris Canonici”, *Communicationes*, 43(2011), 317-318; E. Baura, *Vent'anni di esperienza canonica: 1983-2003*,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3), 159-180.

10) A. Borras, “L'Eglise peut-elle encore punir?”, in *Nouvelle Revue Théologique*, 113(1991), 205-218; L.L. Christians, “Crises et mutations du droit de l'Eglise catholique dans les sociétés européennes secularisées, vers une éthique de responsabilité sociale”, in *Revue théologique de Louvain* 43(2012), 306-342.

11) G. Degiorgi, *I minori nella legislazione della Chiesa*,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161.; D. G. Astigueta, “Las circunstancias agravantes de la pena”, *Anuario Argentino del Derecho Canonico*, 23/1(2017), 85-102.

12) V. De Paolis, “Norme ‘De gravioribus delictis’ riservati alla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Periodica*, 91(2002), 273-312.

13)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Normae de delictis Congregationi pro Doctrina Fidei reservatis seu Normae de delictis contra fidem necnon de gravioribus delictis”, 432-434.

14) Pontificio Consiglio per i Testi Legislativi, “Schema Recognitionis Libri Vi Codicis Iuris Canonici”, 317-320.

15)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56-57.

과거 규정보다 더 확대하고 구체화시켰다.<sup>16)</sup>

교황령은 형벌의 준수가 하느님 백성 전체의 책무라면, 형벌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돌볼 책임은 주교들과 장상들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형벌의 목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피해자를 위한 정의 회복, 거부할 수 없는 범죄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교정, 추문에 대한 보상까지 실현되어야 하고, 목자들과 장상들에게 맡겨진 사목 임무가 이러한 형벌의 목적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황령은 더 이상 단순 권고나 설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한다. 이러한 태도는 긴 시간 범죄인의 고착된 행동 방식을 야기하고 방치하는 것이며, 범죄인의 교정을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 많은 추문과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6권의 개정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동시에 형벌이 신속하고 유용한 도구가 되어 하느님 백성 안에서 정의와 사랑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2. 「83년 법전」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변경사항들

### 2.1. 제기된 질문과 개정의 기준<sup>17)</sup>

작업 초기부터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다. 먼저 ‘형벌 적용이 사목활동에서 요구되는 자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형벌의 목적이 명확해지도록 노력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 교회 내에서 법질서에 대한 경시, 범죄의 교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가버렸던 문제가 오히려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로 번졌고, 그에 따른 신자 공동체의 혼란도 감수해야 했던 이들을 교회 스스로 성찰해야 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형벌 제도를 유용하고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범들을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유용한 형벌 적용의 가능성 문제였다. 교황령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형사 소송 제도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규범들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많은 임의 재량권을 지닌 제제가 의무규정으로 수정되었다.<sup>18)</sup>

---

16) 제6권의 89개 조항 중 작은 변경 사항들을 포함하여 총 74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법조항의 배치는 일부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사항도 추가되었다.

17) D.G. Astigueta, “Una prima lettura”, 356-357.

또 특정 범죄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였고<sup>19)</sup>, 개입이 즉시 필요한 경우 형벌 제재의 부과를 연기할 권한을 제한하였다.<sup>20)</sup> 또한 공범이 발생할 시 권위자의 판단과 제재가 일치하도록<sup>21)</sup>, 또 권위자의 임의 조정 가능성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sup>22)</sup> 물론 교회 권위자에게 주어진 기본 재량권 모두를 삭제하지 않았다. 특정 범죄에 대해 법 자체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정의와 자비로 조치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황령에서 몇 가지 새로운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교회의 직권자들도 형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는 특별히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sup>23)</sup>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Come una madre amorevole)」<sup>24)</sup>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제재의 적용에 있어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목자들의 태만으로 인한 처벌과 그들에게 맡겨진 범죄인에 대한 감독의 의무도 강조되었다. 또한 교회법전의 공포 이후 인가된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범죄들까지도 제6권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약간의 제목 수정과 더불어 조항의 순서도 변경되었다.

## 2.2. 정의 회복을 위한 변화들

개정된 형법은 공동체 생활과 개별 신자들의 선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처벌이 엄

- 
- 18) 「PGD」 제1326조 3항: “위와 같은 경우에 형벌이 임의 재량적 형벌로 설정되어 있다면, 의무적 형벌이 된다.”
- 19) 「PGD」 제1364-1398조: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에 대해 다루고 있다.”
- 20) 「PGD」 제1344조 1호: “1. 범죄인에 대한 너무 성급한 처벌로 더 큰 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추문을 보살할 필요성이 긴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PGD」 제1329조 1항.
- 22) 「PGD」 제1315조 2항 3호.
- 23)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6조: “적용 주체의 범위: 이 제2장에서 언급되는 절차 규범들은 다음과 같은 이들이 저지른, 제1조에 언급된 행위에 관한 것이다. 가) 추기경, 총대주교, 주교, 교황 사절 ... ”
- 24) Francesco,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Come una madre amorevole*”, 4 maggio 2016, *Acta Apostolicae Sedis*, 108(2016) 715-717: “제1조 1. 교구장 주교, 또는 임시로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으면서 개별 교회나 교회법 제368조와 동방 교회법 제313조에 따라 법적으로 개별 교회와 동등한 신자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가 태만이나 결함으로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그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그 손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것이거나 세속 자산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 2. 교구장 주교는 자기가 중대한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목 직무에 요구되는 성실에 객관적으로 매우 태만한 경우에 그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적해졌다. 특히 정의 추구를 강조하는 몇 가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PGD」 제1311조 2항 교회를 주관하는 자는 사목적 사랑과 생활의 모범과 조연과 권고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의의 회복과 범죄인의 교정과 추문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서 늘 교회법적 공평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률 규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함으로써도 공동체 자신과 개별 신자들의 선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PGD」 제1311조 2항은 「83년 법전」 제1341조의 법원(法源)인 1917년 교회법전<sup>25)</sup> 제2214조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 직권자가 형벌을 부과하기 전 사목적 사랑과 생활의 모범 그리고 조연과 권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7년 법전」 제2214조는 1551년 트렌토 공의회 13회기 개혁 교령(Decretum de reformatione)에서 언급된 주교가 “전제 군주가 아닌 목자처럼(pastores non percussores)” 행동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sup>26)</sup> 형벌은 범죄에 대한 복수나 냉혹한 보복이 아니라 사목적 사랑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황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참으로 사랑은 목자들이 형벌 체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교회 공동체에서 형벌 체계를 필요하게 만드는 세 가지 목적, 즉 정의의 요구를 회복하고, 범죄인을 교정하며, 추문을 보상하도록 요청합니다.”<sup>27)</sup>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정의는 법률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고(「83년 법전」 제221조), 교회법적 공평(「83년 법전」 제1752조)은 형벌의 세 가지 목적인 정의의 회복, 범죄인의 교정 그리고 추문의 보상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분명 교회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법의 엄격함을 완화하는 교회법적 공평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목적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

결국 형벌 적용에 있어 교회 공동체와 피해자의 선익 그리고 범죄인의 선익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범죄로 인해 범죄인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목자를 포함한 공동체적 사실을 살펴야 하며, 정의를 위한 범죄의 재구성 과정에서도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교서는 접근하

25) Pius X-Benedictus XV, *Codex Iuris Canonici*, (Romae: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17): *Acta Apostolicae Sedis* 9(1917).(이하 「17년 법전」으로 표기한다.)

26) 「17년 법전」, 제2214조 2항 “Prae oculis autem habeatur monitum Conc. Trid., sess. XIII, de ref., cap. 1: “Meminerint Episcopi alique Ordinarii se pastores non percussores esse, [...]”

27) “Invero la carità richiede che i Pastori ricorrano al sistema penale tutte le volte che occorra, tenendo presenti i tre fini che lo rendono necessario nella comunità ecclesiale, e cioè il ripristino dell'e esigenze della giustizia, l'emendamento del reo e la riparazione degli scandali.”



기 쉽고 안전하며 공적인 보고서 제출 체계를 구성할 의무와 심계명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숨긴 직권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명시하고 있다.<sup>28)</sup>

그리고 많은 주교회회의와 여러 전문가의 요청으로 「PGD」 제1321조 1항에 범죄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추가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벌의 원칙)<sup>29)</sup>와 함께 근대 형벌의 근간으로서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닌다. 참고로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sup>30)</sup>에서 는 이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sup>31)</sup>

또한 「PGD」 제1349조에서는 제재를 부과할 때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도 불리는 이 원칙은 제재의 목적이 정의에 상응해야 하며, 과한 제재로 인해 형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합리성의 균형을 잃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sup>32)</sup>

「83년 법전」 제1349조 형벌이 미확정적인 것이고 법률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은 더 무거운 형벌 특히 교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전적으로 그러하게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종신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PGD」 제1349조 형벌이 미확정적인 것이고 법률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정할 때 재판관은 발생된 추문과 손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택하여야 하나,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전적으로 그러하게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종신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원칙은 정당한 형벌 적용뿐만 아니라 형벌을 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sup>33)</sup>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으로 개인 기본

28)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56-57; 59-61.

29) 「83년 법전」 제221조 3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위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대한법률평론연구회 편, 『소법전(판례와 같이 보는 2018년판)』, 법문북스, 2018, 헌법 제12조 1항: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0) United Nations Human Right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UDHR/Pages/Language.aspx?LangID=kkn>(접속일 2022. 1. 12); 제11조 1항: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31)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2) 김은일, 「형벌과 책임에서 헌법의 비례성 원칙이 가지는 의미」, 『고려법학』 83(2016, 12), 99.

33) 「PGD」 제1317조: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

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방어할 권리도 동반된다.

## 2.3. 명확성을 위한 변화들

### 2.3.1. 명확한 기준

이미 교황령에서 밝힌 과거 형법의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더 명확한 형벌의 확정 문제였다. 먼저 명확성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에 대해 알아보자.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이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다.<sup>34)</sup>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재판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명확성에 대한 변화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직권자들과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제재를 적용해야 더 적합한지를 정하는 때에 객관적인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과 일치해야 하고 형벌을 정할 때 법에 따라 제재를 집행하는 경우 형벌의 세 가지 목적 모두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로 인한 손해, 특히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치와 처벌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추문이 야기될 수 있다.<sup>36)</sup> 결과적으로 「PGD」 제1361조 4항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형벌의 목적을 보완하고 있다.

“ 「PGD」 제1361조 4항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범죄인이 혹시라도 끼친 손해를 보상

---

어야 한다. 그러나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은 하급 입법자에 의하여 설정될 수 없다”; 「PGD」 제1318조: “자동 처벌의 형벌은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설정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정 벌 특히 파문 제재는 최대한 절도를 지켜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설정되지 말아야 한다.”

34) “명확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a poena sine lege certa)”

35) 주용기, 「미필적 고의와 명확성원칙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판결」, 『한양법학』, 25(2014, 8), 350-351.

36) 「PGD」 제1344조: “법률이 명령적 용어로 되어 있더라도 재판관은 자기의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1호 범죄인에 대한 너무 성급한 처벌로 더 큰 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더 적절한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추문을 보상할 필요성이 긴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범죄인이 교정되었고 그뿐 아니라 추문과 혹시라도 끼친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또는 범죄인이 국가 권위에 의하여 충분히 처벌되었거나 처벌될 것으로 예견되면, 형벌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참회 고행을 적용할 수 있다.”

하기 전까지는 사면이 되지 말아야 한다. 범죄인은 이러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도록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 가운데 하나로 강제될 수 있다. 범죄인이 제1358조 제1항의 규범에 따라 교정벌을 사면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형벌의 사면과 관련된 규범으로, 직권자에게 사면의 방식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추가 기준을 제공한다. 그 기준은 충분한 손해의 보상이나 배상이다. 또한 「PGD」 제1347조 2항에서도 범죄인이 그 추문과 손해에 상응하는 참회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항명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손해의 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37)</sup> 그런 의미에서 입법자는 손해의 보상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83년 법전」에서는 이 용어가 다섯 번뿐이지만, 「PGD」 본문에서는 열여섯 번 언급되는데, 대부분 위 조항과 마찬가지로 형벌의 사면을 위한 요건이나 부과될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sup>38)</sup> 다만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오늘날 형법의 추세인 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approach)<sup>39)</sup>가 고려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주교회의 차원에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연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sup>40)</sup>

다음으로 「83년 법전」 제1315조 1항에서 유의어가 반복되는 경향으로 인해 “입법권을 가진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문구가 새 본문에서는 삭제되었다. 대신 제1항을 “형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는 이는 적절한 형벌로 하느님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이후 2항에서 하급 입법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37) 「PGD」 제1347조 2항: “범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울러 추문과 손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을 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보상을 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한 범죄인은 항명을 버린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38) 「PGD」 제1311조 2항; 제1324조 3항; 제1335조 1항; 제1341조; 제1343조; 제1344조(3회); 제1345조; 제1347조 2항(2회); 제1357조 2항; 제1361조(2회); 제1390조 3항; 제1399조.

39) 피해자 중심주의란 권력 관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범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필요와 관심을 중심에 두고 사건 해결 절차를 진행하자는 태도이지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말을 가해자의 말보다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거나 성폭력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여 가해자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는 아니라고 한다. 김주영,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2021. 02. 03,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접속일: 2022. 1. 9).

40) 벨기에 교회법학자 알폰소 보라스(A. Borras) 신부는 가톨릭교회와 국가 간의 공동 중재 센터를 만든 벨기에를 예로 들며 민-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도 수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A. Borras, “Un nouveau droit pénal canonique?”, *Nouvelle Revue Théologique*, 143(2021), 650(636-651).

「83년 법전」 제 1315 조 1항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벌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하여, 하나님의 법률이나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PGD」 제1315조 1항 형벌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는 이는 적절한 형벌로 하나님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2항 법률 자체가 형벌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겨질 수 있다.

2항 하급 입법권자는 제1317조에 유의하면서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적절한 형벌로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2.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들을 추가할 수 있다.
3. 보편법으로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이라고 설정된 형벌을 확정하거나 의무적 형벌로 만들 수 있다.

3항 법률 자체가 형벌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길 수 있다.

이 권한을 하급 입법자에게 허용하지만, 「PGD」 제1317조에 의거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마땅히 직권자의 개인적인 감정과 별개로 형벌이 설정되어야 하며 형벌의 목적을 벗어난 다른 의도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형벌의 제정과 공동체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 사이에 진정한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급 입법권자가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을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기준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사법적 절차가 방해될 때 예외적으로 행정적 절차에 따른 처벌로, 「PGD」 제 1342조에서는 그 행정적 절차에 있어 범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직권자의 신중함과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sup>41)</sup>

---

41) Ibid., 646

「83년 법전」 제1342조 1항 정당한 이유로 사법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결로 적용될 수 있다.

「PGD」 제1342조 1항 정당한 이유로 사법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특히 방어권과 제1608조의 규범에 따라 재결을 내리는 자의 마음 속 윤리적 확실성에 관해서는 제1720조를 지키면서, 재판 외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 수 있다.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결로 적용될 수 있다.

직권자의 판단 기준은 윤리적 확실성이다. 「83년 법전」 제1608조에 근거하여 재결을 내리는 자가 기록 문서들과 증거들로부터 윤리적 확실성을 끌어내야 한다. 윤리적 확실성을 위한 권위 있는 지식이 필요하며 직권자는 모든 증거와 논증을 두 명의 배심관들과 함께 면밀히 숙고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확실성을 얻을 수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고소인의 권리가 확증되지 아니함을 선고하고 피고소인을 풀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피고소인에게 고소와 증거를 알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통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PGD」 제1346조 1항에 「17년 법전」 제2224조 1항 “통상적으로는 범죄한 횡수만큼 여러 번 처벌된다(Ordinarie tot poenae quot delicta).”라는 첫 문장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83년 법전」에 없던 위 문장은 형벌의 누적 원칙을 먼저 세우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로 여겨진다. 영미법 체계(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원칙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각 선고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다. 분명 범죄 횡수에 따른 누적된 형벌 부과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만, 형벌의 누계가 지나치면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sup>42)</sup> 따라서 입법자는 1항에 통상적인 원칙을 세우고, 2항에 형벌의 누계가 지나치다면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 제38조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로 가중주의(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나 상한선이 존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흡수주의(가벼운 형들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에 흡수됨), 혹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sup>43)</sup>

42) 이보영, 강준모,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법학연구』 32(2011, 5), 28(25 -48).

43)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1항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

### 2.3.2. 명확한 표현

제6계명을 거스른 범죄와 관련하여, 「PGD」 제1395조는 「83년 법전」 제1395조보다 더 명확한 표현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고 있다.

「83년 법전」 제1395조 1항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PGD」 제1395조 1항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2항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2항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3항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여 저지르거나, 또는 성직 행위를 하거나 당하도록 어떤 이를 강제하는 성직자는 제2항에 언급된 동일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PGD」 제1395조 1-2항은 동일하지만 3항이 추가되었고 미성년자와의 성범죄는 「PGD」 제1398조로 이동하여 본 조항에서는 삭제되었다. 「83년 법전」에서 언급된 ‘협박(minae)’에 대한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의 문구<sup>44)</sup>와 통합되어 3항으로 옮겨졌다.

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4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1조 1항 가) 1호: “어떤 이에게 폭력이나 위협으로 또는 권위를 남용하여

‘공개된’ 경우(2항)와 ‘힘과 협박 그리고 권위의 남용’으로 인한 경우(3항)를 구분하며 피해자의 범죄적 상황을 확장하였다. 3항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폭력(*metus*)을 추가하며 권위의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후 「83년 법전」 제1397-1398조에 명시된 살인죄와 낙태죄를 「PGD」 제1397조로 통합시켰고, 세 가지 성직자의 미성년자와의 성범죄와 봉헌생활자를 포함하여 직무나 직분을 수행하는 신자들의 성범죄를 「PGD」 제1398조에 독립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로 여겨진다.

“제1398조 1항 직무 파면(박탈) 처분과 그 밖의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성직자는 다음과 같다. 사안이 요구한다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법이 그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성직자.
2.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법이 그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자를 모집하거나 종용하여 음란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실제로든 가상으로든 음란물 전시에 가담하게 하는 성직자.
3. 미성년자들이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들의 음란 영상을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으로든 미풍 양속을 거슬러 입수하거나 보유하거나 전시하거나 유포하는 성직자.

2항 축성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회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품위를 누리거나 직무나 직분을 수행하는 어느 신자이든지 제1항이나 제1395조 제3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면,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도 추가된다.”

우선 자의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에서 언급된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 즉 “이성을 불완전하게 사용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sup>45)</sup>과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자”<sup>46)</sup>를 1항에 추가한다. 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에서 언급된 “힘없는 이”는 제외되었다.<sup>47)</sup>

성적 행위를 하거나 당하도록 강요한 경우”.

45) 「성사의 성성 보호」 6조 1항 1호.

4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1조 2항 가).

47) 피해자를 규명하는 기준에 있어 미성년자와 동등한 자로 간주될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힘없는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히 미성년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D.G. Astigueta, Una prima lettura del Nuovo Libro VI del Codice come strumento della carità pastorale, 378-379.

1항 2호에 미성년자를 모집하거나(devincire) 종용하여(inducere) 실제 음란한 방식으로 노출시키거나, 음란물을 전시하도록 모의하는 성직자의 범죄가 추가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범죄는 1항 3호에서도 언급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미성년자 또는 일반적으로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한 자들의 음란물을 획득, 소지, 전시 및 보급하는 범죄를 언급하고 있다. 이 규범 역시 「성사의 성성 보호」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의 규범을 수용하였다.

### 3. 기타 변경사항

#### 3.1. 처벌과 기타 추가 사항

먼저 가중 처벌 규범인 「83년 법전」 제1326조 1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살펴보자. 「83년 법전」에서는 ‘처벌할 수 있다(potest)’로 명시되었지만 「PGD」에서는 ‘처벌하여야 한다(debet)’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범죄일지라도 성직자의 신분이라면 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제명 처분까지도 제외되지 않는다.<sup>48)</sup> 한편, 「83년 법전」 제1325조에서 언급된 “범죄를 실행하거나 변명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초한 경우의 주정이나 기타 정신적 혼란 그리고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킨 격장”은 과거에는 처벌 가중 요인이 아니라 처벌 면제나 처벌 감경에서 참작되지 않은 요인이었지만 「PGD」 제1326조 1항 4호로 이동하며 처벌이 가중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아스티구에타(D.G. Astigueta) 교회법 교수에 따르면 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정 위원들의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몇몇 위원들은 법을 우회할 의도를 지닌 이를 처벌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범죄인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지나칠 수 있다고 입장도 있었지만, 결국 위 구절은 약간의 문체 변화와 함께 가중되는 상황으로 결정하였다.<sup>49)</sup>

둘째, 목적이 다른 제재의 결합이다. 교정벌과 속죄벌은 그 목적에 따라 구분되지만, 교정벌에 해당하는 범죄일지라도 속죄벌 역시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심

48) 「PGD」 제1364조 2항; 제1370조 1항; 제1379조 2항; 제1385조; 제1394조 1항; 제1395조 1-3항.

49) D.G. Astigueta, Una prima lettura del Nuovo Libro VI del Codice come strumento della carità pastorale, 366.



각한 태도로 인한 범죄로 인해 범죄인에게 과문 제재가 적용될 때 공동체에 끼친 손해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위를 상실하거나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해당 속죄벌을 적용할 수 있다. 입법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PGD」 제1335조 1항을 설정한다.<sup>50)</sup> 또한 「PGD」 제1358조 2항에 따라 교정벌을 사면받았다고 해도 범죄인의 유익과 사회 공익을 위해 참회 고행도 부과할 수 있다.<sup>51)</sup>

셋째, 「83년 법전」 제1333조 1항도 변경되었다. 성직자에게만 해당하던 정직 처벌이 제거되었다.<sup>52)</sup> 이러한 방식으로, 성품권과 더불어 통치권(예를 들어 관사) 혹은 직무를 지닌 자는 직무와 결부된 권리 중 하나 또는 전체의 행사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넷째, 「83년 법전」 제1336조에서는 속죄벌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sup>53)</sup>

「83년 법전」 제1336조 1항 범죄인에게 종신으로나 유기한으로나 무기한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속죄벌은 법률이 설정하였을 그 밖의 다른 형벌 외에도 다음과 같다.	「PGD」 제1336조 1항 범죄인에게 종신으로나 유기한으로나 무기한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속죄벌은 법률이 설정하였을 그 밖의 다른 형벌 외에도, 제2-5항에 열거된 것들이다.
---	--

- |  |   |
|--|---|
|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                         | 「PGD」 제1336조 1항 범죄인에게 종신으로나 유기한으로나 무기한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속죄벌은 법률이 설정하였을 그 밖의 다른 형벌 외에도, 제2-5항에 열거된 것들이다.                |
| 2.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을 단순히 명예적인 것까지도 박탈하는 것 | 4항 박탈 처분은 다음과 같다.<br>1. 직무나 임무나 교역이나 직분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직무나 임무에 결부된 일부 활동단.<br>2. 고백을 듣거나 설교할 특별 권한.<br>3. 위임된 통치권. |

50) 「PGD」 제1335조 1항: “재판 절차에서 또는 재판 밖의 제결로써 교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경우, 관할권자는 정의를 회복하거나 추문을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속죄벌도 부과할 수 있다.”

51) 「PGD」 1358조 2항: “교정벌을 사면하는 이는 제1348조의 규범에 따라 조치하거나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다.”

52) 「83년 법전」 제1333조 1항: “성직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정직(停職) 제재는 다음의 것을 금지한다”; 「PGD」 제1333조 1항 “정직 제재는 다음의 것을 금지한다.”

53) 명확한 비교분석을 위해 「PGD」 제1336조 3항과 4항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4. 어떤 권리나 특전 혹은 표장이나 명의.
5. 주교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 보수의 전부나 일부. 다만 제1350조 제1항의 규정도 보존된다.

3. 제2호에 열거된 것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나 일정한 장소 밖에서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 이러한 금지는 결코 행위 무효의 벌칙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다.

3항 금지 처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
2. 직무나 임무나 교역이나 직분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직무나 임무에 결부된 일부 활동만을, 어디서나 혹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서 혹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 밖에서 행사하는 것.
3. 성품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4. 통치권에 의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5. 어떤 권리나 특전을 행사하는 것 또는 표장이나 명의를 사용하는 것.
6. 교회법적 선거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누리는 것 또는 교회의 평의회나 합의체에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
7. 교회 복장이나 수도복을 입는 것.

4. 형벌로 다른 직무에 전임시키는 것.

5.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것.

5항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것.

『PGD』 제1336조에서는 속죄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명령 처분, 박탈 처분, 금지 처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명령 처분에 특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명령과 더불어 주교회의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목적을 위한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을 추가하였고, 박탈 처분과 금지 처분에 대한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형벌을 더 상세하게 설정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의 종류를 나열한

「17년 법전」 제2291조와 제2298조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로부터 몇 가지 범죄 항목을 가져왔다.<sup>54)</sup> 반면, 다른 직무에 전임시키는 형벌이 사라졌고, 2011년 초안에서 언급된 성품권과 관련된 무자격법(inhabilitationes)을 추가하지 않았다.<sup>55)</sup>

다섯째,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에 해당하는 「83년 법전」 제1339조에 새로운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PGD」 제1339조 4항 어떤 이에게 한 번이나 여러 번의 경고나 견책이 헛되이 행해졌다거나, 또는 경고나 견책으로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직권자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정확히 규정하는 형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사건의 중대성이 요청한다면, 특히 어떤 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 중에 있다면, 법 규범에 따라 판결이나 재결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형벌 외에도 직권자는 개별 교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그를 감독 아래 두어야 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를 위협’이 있거나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때에도 부과된다. 만약 상급자가 그 사람에게 경고하였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4항은 경고와 형벌 명령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강조한다. 그리고 5항에서는 범죄인의 교정을 위한 조치로 「PGD」 제1346조 2항과 같이 그를 감독(vigilantia) 아래 두는 형벌을 도입한다. 이는 범죄인의 죄책과 더불어 직권자와의 연대책임도 강조하는 조치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83년 법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범죄들이 추가되었다. 먼저 여성 서품 관련 금지규정(「PGD」 제1379조 3항)으로, 서품을 수여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인수를 받으려는 여자도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 자들에게 성사를 고의적으로 집전하는 것(「PGD」 제1379조 4항), 독성의 목적으로 성찬 거행을 위한 재료를 축성하는 행위(「PGD」 제1382조 2항)를 포함한다. 기술적 도구로 고백 내용을 녹음하거나 보급하는 행위(「PGD」 제1386조 3항), 그리고 교황 비밀에 대한 위

54) 「17년 법전」 제2291조; 제2298조.

55) Pontificio Consiglio per i Testi Legislativi, *Schema recognitionis Libri VI Codicis Iuris Canonici (Reservatum)*, (Città del Vaticano: Typis polyglottis Vaticanis, 2011): <https://www.iuscangreg.it/pdf/SchemaRecognitionisLibriVI.pdf>(접속일 2022. 1. 12) 제1336조 5항: “Inhabilitationes: 1° consequend i omnia vel aliqua officia aut munera; 2° recipiendi ordines sacros; 3° recipiendi facultatem absolvendi; 4° recipiendi potestatem regiminis delegatam; 5° consequendi functiones in sacra liturgia vel in cultus celebrationibus vel in aliis vitae ecclesialis ambitibus; 6° recipiendi institutionem ad lecturatum vel acolythatum; / consequendi aliquod ius, privilegium, titulum honorificum.”

반(「PGD」 제1371조 4항), 교역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유기(「PGD」 제1392조), 이동 음란 영상(「PGD」 제1398조 1항 3호), 범죄 신고 의무 위반(「PGD」 제1371조 6항) 등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겪었던 문제들로, 무자격에 매여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숨기고 성품에 나아기는 것(「PGD」 제1388조 2항)과 이미 판결된 형벌 집행 교령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행위(「PGD」 제1371조 5항)까지 처벌 대상이다.

### 3.2. 재정적 차원의 범죄

「83년 법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재정적 차원의 범죄에 대해 「PGD」 제1376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83년 법진」 제1377조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 없이 양도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PGD」 제1376조 1항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되면서,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교회 재산에서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2. 규정된 자문이나 동의나 허가 없이, 또는 유효성이나 합법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다른 요건 없이 교회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관리 행위를 집행하는 자.

2항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되면서,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범죄를 중대한 자기 탓(죄과)으로 저지르는 자.
2. 교회 재산을 관리할 때 기타의 방법으로 중대하게 태만하다고 드러난 자.

교회법전 제5권에 해당하는 교회 재산관리 규정이 법전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은 다소 모호했고 빈약했다. 「PGD」 제1376조에서 교회 재산의 횡령과 재산이익 방해죄, 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태만, 불법적인 양도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속죄벌의 처분과 더불어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도 포함되었다. 재산법의 특성상 지역 국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대한민국 역시 재산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기에, 주교회이나 교구 차원에서 교회 정신에 부합하고 국가법에 반하지 않는 상세한 재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교회 내 여러 가지 재산 분쟁에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sup>56)</sup>

### 3.3. 시효에 관한 규범

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이나 사면 판결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형사 소권(actio criminalis)이 없어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성직자와 봉헌생활자들이 저지른 범죄인 경우, 7년 혹은 20년까지 그 시효 기한이 늘어난다.

<p>「83년 법전」 제1362조 1항 2호 5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94조, 제1395조, 제1397조, 제1398조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p>	<p>「PGD」 제1362조 1항 2호 제1호의 규정은 보존되면서, 7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76조, 제1377조, 제1378조, 제1393조 제1항, 제1394조, 제1395조, 제1397조, 제1398조 제2항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 또는 2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98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p>
---	---

시효 기한이 7년인 범죄는 교회 재산에 대한 범죄(「PGD」 제1376조), 부정 청탁에 관한 범죄(「PGD」 제1377조), 직무 남용 범죄(「PGD」 제1378조), 성직자에게 금지된 상행위(「PGD」 제1393조 1항), 결혼 시도(「PGD」 제1394조), 성직자의 제6계명에 관한 범죄(「PGD」 제1395조), 물리적 폭력(「PGD」 제1397조) 및 봉헌생활자가 범한 성적 학대(「PGD」 제1398조 2항) 등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시효 기한이 20년인 범죄는 미성년자

56) 지용식, 「천주교유지재단인 ‘교구’와 소속 ‘본당’의 교회법-민법적 성격과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 38(2021), 139-140, (119-149).

와 관련된 범죄(「PGD」제1398조 1항)뿐이다. 물론 「PGD」제1362조 1항 3호에 따라 지역교회에서 개별법으로 시효 기한을 달리 정한 범죄에 대한 존중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7년에서 25년까지 주어질 수 있으며, 성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또한 미성년자(만 13세로 규정)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sup>57)</sup>

## 결론

교회법전 제6권인 형법의 엄격한 변화로 인해 소위 ‘자비를 잃어버린 교회’,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자비’를 마음 여린 관대함이나 자유방임적 입장과 혼동할 때,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과거 엄격한 규율 실행을 보류한 결과, 법의 공백 상태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에 중대한 위기를 몰고 온 추문들만 발생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형법은 목자의 신속한 대응과 규율의 명확성 추구, 기중 처벌 강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구체적 형벌 명시, 범죄의 무게에 따른 처벌인 병과주의 원칙, 성직자만이 아닌 모든 신자에게까지 확대된 정직 처분, 시효 기한이 늘어난 특정 범죄, 범죄인의 책임과 더불어 직권자의 연대책임까지 강조한다. 물론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엄벌주의(嚴罰主義), 응보주의(應報主義)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개정 내용 중 교회법적 공평, 범죄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범죄인을 위한 자비와 교정, 손해 보상 및 배상 강조, 금전적 보상만이 아닌 윤리적 보상까지도 고려 대상이라는 점 등 형법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필자는 교회 형법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형법과의 관계, 교회 사법 권한을 지닌 이들의 횡포 가능성, 교회의 제재로 인한 개인의 피해와 보상, 범죄

5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3항」, <https://www.law.go.kr> (접속일 2022. 1. 12)

민감성 문제, 개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허위사실로 인한 추문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등 본 연구에서 다룰 수 없었던 한계들을 밝히는 바이며,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한국교회의 적응과 조치 그리고 여러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Pius X-Benedictus XV, *Codex Iuris Canonici*, (Romae: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17): *Acta Apostolicae Sedis* 9(1917).
- 요한바오로 2세,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 범죄에 관한 규범을 발표하는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43(2011), 85-102.
- \_\_\_\_\_,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라틴어-한국어 대역<수정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프란치스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60(2019), 56-69.
- Francesco,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Come una madre amorevole”, 4 maggio 2016, *Acta Apostolicae Sedis* 108(2016) 715-717.
- \_\_\_\_\_, Costituzione Apostolica “Pascite gregem Dei”, 23 maggio 2021, *Communicationes* 53(2021), 9-12.
-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Normae de delictis Congregationi pro Doctrina Fidei reservatis seu Normae de delictis contra fidem necnon de gravioribus delictis”, 21 maggio 2010, *Acta Apostolicae Sedis* 102(2010) 419-434.
- Pontificio Consiglio per i Testi Legislativi, “Schema Recognitionis Libri Vi Codicis Iuris Canonici”, *Communicationes* 43(2011) 317-320.
- \_\_\_\_\_, *Schema recognitionis Libri VI Codicis Iuris Canonici (Reservatum)*, (Città del Vaticano: Typis polyglottis Vaticanis, 2011).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편, 『소법전(판례와 같이 보는 2018년판)』, 법문북스, 2018.
- 발터 카스퍼(Walter Kasper), 『자비(Barmherzigkeit)』, 최용호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5, 314-324.
- Degiori G., *I minori nella legislazione della Chiesa*,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 Baura E., *Vent'anni di esperienza canonica: 1983-2003*,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3).
- 김은일, 「형벌과 책임에서 헌법의 비례성 원칙이 가지는 의미」, 『고려법학』 83(2016, 12), 99(75-125).



- 이보영, 강준모,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법학연구』 32(2011, 5), 25-48.
- 주용기, 「미필적 고의와 명확성원칙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판결」, 『한양법학』 25(2014, 8), 333-361.
- 지용식, 「천주교유지재단인 ‘교구’와 소속 ‘본당’의 교회법-민법적 성격과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 38(2021), 119-149.
- Astigueta, D.G., “Las circunstancias agravantes del la pena”, *Anuario Argentino del Derecho Canonico* 23/1(2017), 85-102.
- \_\_\_\_\_, “Una prima lettura del Nuovo Libro VI del Codice come strumento della carità pastorale”, *Periodica* 110(2021), 351-384.
- Borras, A., “L’Eglise peut-elle encore punir?”, *Nouvelle Revue Théologique* 113(1991), 205-218.
- \_\_\_\_\_, “Un nouveau droit pénal canonique?”, *Nouvelle Revue Théologique* 143(2021), 636-651.
- Christians L.L., “Crises et mutations du droit de l’Eglise catholique dans les sociétés européennes secularisées, vers une éthique de responsabilité sociale”, *Revue théologique de Louvain* 43(2012), 306-342.
- De Paolis V., “Norme ‘De gravioribus delictis’ riservati alla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Periodica* 91(2002), 273-312.
- 김주영,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2021. 02. 03,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3항」, <https://www.law.go.kr>.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UDHR/Pages/Language.aspx?LangID=kkn>.

## 교회법전 제6권의 개정에 따른 교회 형법의 변화 연구

김의태

교황 베네딕도 16세 재임 당시 사제들의 미성년자 성추행 추문과 바티칸 은행의 부패와 비리가 불거지고, 가톨릭교회는 단순한 권고와 설득만으로 범죄의 결과인 피해와 추문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2021년 5월 23일 교황령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Pascite Gregem Dei)이 공포되며 교회법전 제6권인 교회 형벌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법자의 개정 의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며 그 의도는 형벌의 목적인 정의 회복, 범죄인의 교정, 추문 보상을 명확히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목자의 신속한 대응, 규율의 명확성 추구, 가중 처벌 강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구체적 형벌 명시, 범죄의 무게에 따른 처벌인 병과주의 원칙, 성직자만이 아닌 모든 신자에게까지 확대된 정직 처분, 시효 기한이 늘어난 특정 범죄, 범죄인의 죄책과 직권자의 연대성 등 형벌의 엄중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회법적 공평을 간과할 수 없기에, 범죄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범죄인을 위한 자비와 교정, 손해 보상 및 배상 강조, 금전적 보상만이 아닌 윤리적 보상까지 엄격함을 완화하는 조치도 추가되었다.

**주제어:** 교회법전 제6권, 개정, 형법, 범죄, 미성년자

## A Study on Changes in Penal Laws according a new Book VI of the Code of Canon Law

Kim, Eui Tae

When Pope Benedict XVI was in office, the Catholic Church judged that it was difficult to recover from the damage and scandal resulting from the crime with simple recommendations and persuasion. When Pope Francis was in office, the Apostolic constitution 「Pascite Gregem Dei」 was promulgated on May 23, 2021 and the penal law for the church (Book VI of the Code of Canon Law) was revised.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or's intention to revis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past norms. Therefore the intention of the revision is to clearly realize the purpose of punishment, for the amendment of the offender, the restoration of justice and the reparation of scandal. For example,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has been emphasized: Pastor's proper and prompt measures, the vagueness doctrine,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the principle to impose together punishments, the suspension extended to all believers, certain crimes with an extended prescription, and the imputable criminal and the Ordinary with the solidarity. In addition, systems have been added to ease the strictness and to be applied with canonical equity: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ercy and amendment for the offende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ethical compensation.

**Key Words:** canon law, reform, penal law, crime, minor.

---

논문 투고일	2022년 1월 16일
논문 수정일	2022년 3월 29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2년 3월 28일

---